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7회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성명		점수	/ 100
----	--	----	-------

2026-09-16 전면 교체한 자체제작 예상문제. 작성 기준일 2026-09-15. 전체 정답·현행법령·의미중복 최종
검수와 시험 관리기관 직접 원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정답·해설은 웹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예산을 모두 집행했지만 구매한 장비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는다. 조달 목적에 비추어 추가로 확인할
성과는?

- (1) 예산 집행률이 100%인지 여부만
- (2) 실제 서비스 수요 충족도와 이용 효과
- (3) 예산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만
- (4) 공급업체 선정에 걸린 일수만

2. 교재가 공공조달 수요자의 범위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는 것은?

- (1) 기관 이름에 '주식회사'가 있으면 공공조달과의 관련성을 모두 배제한다.
- (2) 중앙정부 부처만 수요자가 될 수 있다.
- (3) 공적 업무를 위탁받거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주체도 관련 범위에서 검토한다.
- (4) 민간주체의 모든 사적 구매에 같은 계약법이 적용된다.

3. 일반 사무용품은 중앙에서 통합 구매하고, 특수 현장 수요는 각 기관이 처리한다. 운영체계 분류는?

- (1) 혼합형 조달
- (2) 모든 수요를 한 기관이 처리하는 순수 중앙집중형
- (3) 구매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비조달형
- (4) 모든 수요를 각 기관이 처리하는 순수 분산형

4. 공급업체가 공공입찰 참여 직원에게 금품 제공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신고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를 평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신고절차를 마련하면 입찰가격 심사까지 면제된다.
- (2) 청렴성 확보는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통제와 행동도 포함한다.
- (3) 민간기업의 자율조치는 공공조달의 위험 관리와 연결될 수 없다.
- (4) 청렴성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공급업체의 절차와 무관하다.

5. 산간 관측소마다 설치환경이 달라 현장 요구에 맞춘 소량 장비가 필요하다. 해당 조직은 허용된 범위에서 각 기관의 자체조달을 검토한다. 분산형 조달의 장단점을 짚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1) 조달을 각 기관이 하므로 법규와 감독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 (2) 표준화와 대량구매 효과가 항상 최대가 되지만 현장 대응은 불가능하다.
- (3) 현장 수요 대응은 유연해질 수 있으나 물량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은 작아질 수 있다.
- (4) 소량 특수수요일수록 구매수요가 자동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6. 해당 계약에 필요한 수행경험·기술·인력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업체가 경쟁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은?

- (1) 경쟁 없는 단독 공급자 지정
- (2) 검사 이후의 계약금액 정산
- (3) 희망수량에 따른 배분
- (4) 제한경쟁

7. 특정 계약에서 지명된 여러 업체가 각각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유일한 공급자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를 구별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전자는 모든 국민이 공급자이고 후자는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이다.
- (2) 둘 다 업체 이름이 알려져 있으므로 언제나 같은 절차이다.
- (3) 후자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입찰을 접수해야 한다.
- (4) 전자는 선정된 업체 간 경쟁이고, 후자는 경쟁 상대가 없는 단독공급 상황이다.

8. 담당자가 '공고가 번거롭고 친숙한 업체라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계약을 추진하려 한다. 우선 필요한 검토는?

- (1) 업체와 구두로 합의하면 사유 검토는 완료된다.
- (2)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사유와 객관적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 (3) 친숙한 업체이면 계약방법 선택의 검토를 생략한다.
- (4) 견적서의 파일명만 변경하면 경쟁계약이 된다.

9. 지출규모가 크고 기술적 요구와 공급위험도 높은 사업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설계한다. 적절한 방향은?

- (1) 다른 국가의 화면을 그대로 복제하면 운영환경 분석은 끝난다.
- (2) 모든 사업을 단가만 비교하는 주문 화면 하나로 처리한다.
- (3) 거래금액이 크면 전자적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
- (4) 제안·평가·협의를 계약관리 기능을 사업 특성에 맞추어 지원한다.

10. 담당자가 상품을 장바구니에만 담고 조달요청·납품요구 진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적절한 설명은?

- (1) 선택한 상품은 공급자의 주문 확인 없이 언제나 자동 배송된다.
- (2) 장바구니 선택과 실제 납품요구의 발행은 구분해야 한다.
- (3) 장바구니 선택만으로 공급자의 납품 완료가 증명된다.
- (4) 장바구니에 담은 즉시 모든 계약의 대금지급이 완료된다.

11.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작업과, 이전 후 상시 모니터링·장애대응 업무를 각각 구분하면?

- (1) 운영관리서비스 / 토지매입
- (2) 클라우드 자원 임대만 / 물품 폐기만
- (3) 현물 재고평가 / 납품보증보험
- (4) 마이그레이션서비스 / 운영관리서비스

12. 물품목록제도의 기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 (1) 제품 제조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것
- (2) 모든 물품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고정하는 것
- (3) 물품정보를 체계화하여 생산·수급·관리·운용에 활용하는 것
- (4) 입찰자의 가격제안서를 공개 전에 열람하는 것

13. 상품분류 정비보고서에서 함께 검토할 정보로 적절한 것은?

- (1) 관련 분류와 통합 가능성, UNSPSC 매핑, 관련 계약 현황
- (2) 담당자의 개인 여행 일정과 연락처
- (3) 한 업체가 원하는 번호의 모양만
- (4) 상품의 광고 문구와 인기 순위만

14.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원재료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지만 납품대금은 나중에 받는다. 교재가 설명하는 공공구매론의 활용으로 적절한 것은?

- (1) 납품계약금액 전액을 상환 의무 없는 정부보조금으로 신청한다.
- (2) 계약상 납품의무를 금융기관에 이전하여 납품을 생략한다.
- (3) 체결된 공공계약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생산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 (4) 입찰 전 예상 수주금액을 납품이 완료된 실적으로 등록한다.

15. 적용되는 가상 지침은 대상 자재의 직접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예외사유가 확인된 때만 다른 조달을 허용한다. 시공 예정 업체가 “직접구매가 번거롭다”고만 요청했다. 이 자료의 한계는?

예외 요건의 실제 목록·금액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문에 제시된 원칙·예외 구조만 판단합니다.

- (1) 업무상 선호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침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빙이 더 필요하다.
- (2) 시공 예정 업체의 요청은 예외사유 확인을 대신한다.
- (3)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4) 구매금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면 예외사유 검토가 필요 없다.

16. 여러 기관이 환경성 기준을 예고하고 실제 구매에 일관되게 반영하자 공급기업들이 저오염 제품 개발 투자를 늘렸다. 이는 녹색조달의 어떤 효과를 보여 주는가?

- (1) 인증제품을 구매하면 제품 사용단계의 환경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효과이다.
- (2) 환경기준이 민간시장 경쟁을 대체하여 제품개발을 불필요하게 하는 효과이다.
- (3) 구매기관의 모든 유지관리비를 공급기업에 이전하는 효과이다.
- (4) 공공부문의 구매수요가 공급기업의 환경기술 개발과 생산방향을 바꾸는 효과이다.

17. 업체가 NEP 인증서를 받았지만 우수조달물품 지정 결과는 아직 없다. 기술자료에는 “NEP 취득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완료”라고 적었다. 확인할 핵심은?

- (1) NEP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같은 이름의 인증이다.
- (2) 구매기관이 NEP 제품을 한 번 구매하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바뀐다.
- (3) NEP는 관련 적용기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는 별도 지정 결과로 확인한다.
- (4) NEP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18. 납품업체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사의 모든 납품을 중증장애인생산물 실적으로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적절한 구별은?

- (1) 장애인기업 해당 여부와 중증장애인생산물의 시설·제품 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
- (2) 두 제도는 명칭만 다르므로 어느 한 확인만 있으면 나머지도 충족한다.
- (3) 장애인기업 제품은 물품이고 중증장애인생산물은 모두 공사이므로 확인이 필요 없다.
- (4) 납품업체의 상호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두 실적을 함께 인정한다.

19. 조달기업이 ㉠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 감축, ㉡ 근로자 차별 방지, ㉢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 ESG 영역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 ㉠ 환경(E) — ㉡ 사회(S) — ㉢ 지배구조(G)
- (2) ㉠ 사회(S) — ㉡ 환경(E) — ㉢ 지배구조(G)
- (3) ㉠ 지배구조(G) — ㉡ 사회(S) — ㉢ 환경(E)
- (4) ㉠ 환경(E) — ㉡ 지배구조(G) — ㉢ 사회(S)

20. 사인 간 특정물 매매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그 물건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여 인도가 불가능해졌다. 매수인의 수령지체 등 예외와 위험이전 특약은 없다. 민법 제537조에 따른 설명은?

특정물의 후발적 이행불능이며 양쪽 모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수령지체·특약·특별법은 제외합니다.

- (1) 매수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멸실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
- (2) 매도인은 잘못이 없으므로 인도 없이 대금 전액을 청구한다.
- (3) 특정물이 멸실하면 모든 매매는 자동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다.
- (4) 매도인은 그 물건을 인도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1. 기관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같은 종류의 소모품을 반복 구매할 계획이다. 개별 발주 한 건의 금액만으로 추정가격을 정하려는 의견에 대한 검토로 적절한 것은?

- (1) 개별 주문서 수로 연간 예상액을 나눈 평균 주문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2) 처음 주문할 물량만 계산하고 후속 주문은 추정가격과 무관하게 취급한다.
- (3) 반복 계약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 실적의 조정액이나 앞으로의 조달 예정 총액 등을 검토한다.
- (4) 전년도 실적은 금액이나 수량의 변동 전망과 관계없이 그대로 확정값으로 사용한다.

22. 법령과 공고가 이행능력 심사를 거치도록 정한 국가 지출계약에서 최저가격 입찰자가 심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적절한 판단은?

- (1) 다른 업체의 심사점수를 빌려 최저가격 입찰자의 점수로 사용한다.
- (2) 이행능력 심사는 계약 체결 뒤에만 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한다.
- (3) 가격이 가장 낮다는 사실로 이행능력 심사 통과를 추정한다.
- (4) 최저가격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고된 이행능력 심사를 면제할 수 없다.

23. 분쟁조정 중 한 당사자가 새로운 핵심 사실 자료를 제출했다.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상대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다. 적절한 운영은?

- (1) 위원이 자료를 이해하면 당사자가 쟁점을 다룰 권한은 사라진다.
- (2)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 진술과 자료 검토 기회를 확보한다.
- (3) 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당사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 (4)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상대방 의견 없이 사실로 확정한다.

24. 공공조달 정책 차원의 심의기구가 다룰 안건과 개별 계약의 평가위원회 안건을 구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1) 정책 심의기구는 전국의 모든 계약에 직접 낙찰점수를 부여하는 기관이다.
- (2) 혁신조달 지원 방향은 공공조달과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정책 검토 대상이 아니다.
- (3) 개별 용역 평가위원회가 국가 전체 조달정책의 법적 기준을 개정한다.
- (4) 중장기 조달정책·혁신조달의 추진 방향은 정책 차원의 안건이고, 특정 제안서의 점수 부여는 개별 평가의 안건이다.

25. 나라장터 공고 첨부문에는 “9월 1일 공고”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 전자 게시일은 9월 3일이다. 교재에 인용된 전자조달 공고 규정에 따라 공고일을 판단할 때 우선 확인할 것은?

날짜는 가상이며 이 문항은 나라장터 전자공고 규정의 공고일 판단만 묻는다.

- (1) 문서를 작성한 직원이 내부 결재를 올린 날로 본다.
- (2) 처음 입찰자가 파일을 내려받은 날로 본다.
- (3) 첨부문서의 기재가 우선이라는 일반적인 내용 기준만 적용하여 9월 1일로 본다.
- (4) 공고일에 관한 별도 기준인 전자조달시스템의 실제 게시일이다.

26. 교재의 전자조달법 제9조의2 설명에서 하도급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활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의 범위로 적절한 것은?

- (1) 전자조달시스템뿐 아니라 수요기관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도 포함한다.
- (2) 담당자 개인이 계약서를 보관한 컴퓨터는 목적과 요건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법정 시스템이다.
- (3) 입찰가격을 계산하는 엑셀 파일만 있으면 계약대금 청구·지급 관리요건도 모두 충족한다.
- (4) 기관이 적법하게 구축한 전자하도급 관리시스템도 규정상 모두 제외된다.

27. 공기업 계약에 관한 이의신청은 국제입찰 해당 여부만 다룰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공고·낙찰 관련 사항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검토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열거된 계약 쟁점 대신 업체의 모든 영업 손실이 자동으로 조정 대상이다.
- (2) 국제입찰이 아니면 공기업 계약의 어떤 쟁점에도 이의를 낼 수 없다.
- (3) 낙찰자가 정해지면 공고나 참가자격에 관한 위법성은 개념상 문제 될 수 없다.
- (4) 국제입찰 범위 이외에도 규칙이 정한 계약 관련 이의신청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8. 유효한 중재합의에 따라 판정이 내려졌으나 패소 업체는 사실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 소송의 항소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고 한다. 적절한 설명은?

- (1) 중재판정의 취소 등 법정 통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항소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 (2) 중재판정이 있으면 어떤 중대한 절차 위반도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 (3) 판정에 반대한다는 이메일을 중재인에게 보내면 판정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 (4) 중재판정은 모든 사건에서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으므로 자유롭게 항소할 수 있다.

29. 기존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례이고, 검토 중인 계약은 중앙관서가 직접 체결한 사례이다. 같은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복사하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과거 사례는 어떤 공통된 법적 원리도 참고할 수 없다.
- (2) 물품의 같음보다 계약 주체·적용 법령·쟁점 사실의 차이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 (3) 물품명이 같으면 계약 당사자와 법령이 달라도 모든 해석 결론이 같다.
- (4) 조달청이라는 이름이 사례에 있으면 언제나 지방계약법이 배제된다.

30. 허위서류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사안에서 담당자는 허위서류 발견만으로 계약보증금 귀속도 자동 확정됐다고 했다. 교재가 제시한 쟁점 구별은?

- (1) 허위서류 제재·계약 종료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귀속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 (2) 허위서류가 있으면 검사·인수된 부분과 이행 여부의 확인은 금지된다.
- (3) 보증금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이면 허위서류에 대한 제재도 전혀 불가능하다.
- (4)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든 계약보증금은 언제나 전액 귀속된다.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공공조달시장에 새로 참여하는 공급업체가 자사의 공급 가능 품목과 맞는 기회를 찾고 있다. 첫 수요정보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제품 명칭이 유사하면 요구 규격 확인 없이 공급 가능 수요로 확정한다.
- (2) 모든 공공기관의 총예산만 보고 개별 품목 수요도 같다고 판단한다.
- (3) 해당 품목의 발주기관, 예상 물량과 시기 등을 찾아 자사의 공급 가능 범위와 연결한다.
- (4) 전년도에 납품한 적이 없는 기관은 향후 수요가 없다고 제외한다.

32. 지난해 만든 비상운송계획의 대체 운송업체가 폐업했다. 계획서가 승인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 (1) 계획서가 존재하므로 대체 운송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본다.
- (2) 승인 시점에 유효했으면 이후 점검은 불필요하다.
- (3) 현재 실행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대체 경로와 연락망을 갱신해야 한다.
- (4) 원래 업체의 폐업 사실을 삭제하면 계획이 유효해진다.

33. 계약 예상금액은 같은 두 사업 중 하나는 상용 장비 반복구매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의 맞춤 연구용역이다. 적절한 공급전략은?

- (1) 반복구매에는 수요와 공급시장 조사가 필요 없다.
- (2) 연구용역도 상용품 재고 확인만으로 준비한다.
- (3) 표준화·전문성·공급시장 차이를 반영해 준비전략을 달리한다.
- (4) 금액이 같으므로 기술자료와 공급방법도 같게 정한다.

34. 장비가 실내 상온에서는 요구 정밀도를 만족하지만, 공고는 저온 옥외 사용을 전제로 한다. 필요한 기술역량 확인은?

- (1) 요구 사용환경에서 성능을 충족하는지 검증한다.
- (2) 사용환경은 시험성과적과 관계없다고 본다.
- (3) 브랜드가 알려져 있으므로 조건별 시험을 생략한다.
- (4) 상온 결과를 모든 환경의 결과로 간주한다.

35. 한 공급업체가 제안금액 1,000만 원을 검토한다. 자체 분석한 제작비 720만 원 외에 운송·설치비 100만 원, 계약조건 이행을 위한 추가 시험비 80만 원, 해당 사업에 배분할 내부 관리비 50만 원이 든다. 아래 비용만 고려한 예상 잔여금액은?

가상의 내부 의사결정 계산입니다. 부가가치세·금융비용·법정 원가계산 비율 및 그 밖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1) 100만 원
- (2) 50만 원
- (3) 280만 원
- (4) 180만 원

36. 가상의 위험 A는 발생확률 20%·손실 100만원, B는 2%·손실 1,000만원이다. 기대손실만 단순 계산한 결과와 해석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B의 확률이 낮으므로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관리에서 제외한다.
- (2) A 20만원, B 200만원이므로 항상 B만 관리한다.
- (3) 기대손실이 같으면 발생 사건의 규모와 대응도 같다.
- (4) 둘 다 20만원이지만 결과의 심각성이 달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37. RFI 응답에 기술성능·공급가격·규정 준수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한 팀 구성으로 적절한 것은?

- (1) 기술질문은 가격담당자의 추정으로만 답한다.
- (2) 모든 분야를 확인 없이 영업 문구로 통일한다.
- (3) 분야별 자료는 연결 검토 없이 그대로 합친다.
- (4) 분야별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총괄 담당자가 일관성을 검토한다.

38. 조달 관련 행정예고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검색했으나 결과가 없다. 센터는 부처 행정예고 목록이 관보 게재분을 기준으로 제공된다고 안내한다. 다음 확인으로 적절한 것은?

- (1) 민간 커뮤니티에 게시된 요약문을 공식 예고문으로 확정한다.
- (2) 소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행정예고를 확인한다.
- (3) 검색 결과가 없으면 그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확정한다.
- (4) 입찰공고 게시판의 마감일을 그 행정예고의 의견제출 기한으로 사용한다.

39. 사전규격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업체가 제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요구 과업별 원가와 비교 가능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제안한다.
- (2) 예산을 늘려 주면 무조건 낙찰된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다.
- (3) 희망 이익이 적다는 감정만 적는다.
- (4) 다른 대형 사업의 총예산을 조건 비교 없이 가져온다.

40. 가상의 공고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라고 정했고 계약체결일과 별도로 착수일을 지정한다. 완료일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체결일과 착수일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계약체결일
- (2) 투찰서를 처음 작성한 날
- (3) 결과물을 처음 납품한 뒤 업체가 정한 날
- (4) 명시된 착수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 조건

41. 가상 공고는 입찰보증 제출 마감 10일 18시, 가격입찰 마감 11일 14시를 각각 정했다. 면제 대상이 아닌 업체가 가격 마감만 지키면 된다고 계획했다. 일정상 누락은?

날짜·시간 및 보증 제출조건은 가상 공고의 명시사항입니다.

- (1) 보증 발급을 신청한 시각만으로 제출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2) 가격입찰 마감이 늦으므로 보증 마감은 자동 연장된다.
- (3) 보증을 먼저 제출해야 하는 별도 마감일을 반영하지 않았다.
- (4) 입찰보증은 개찰 후 선정된 자만 내므로 일정은 적절하다.

42. 기존 기록을 새 시스템으로 옮기는 용역 제안요청서에 “기록 10만 건 이관”만 적혀 있다. 현재 저장형식·필드구조·적법한 접근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변환작업과 이관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요청할 정보는?

독립 구성한 기술용역 사례이다. 개인정보 전체 수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1) 건수만 알면 어떤 저장형식도 같은 작업량이므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
- (2) 민감정보를 보호한 자료구조·표본과 제공 가능한 추출형식, 접근권한 및 제공 절차를 확인한다.
- (3) 이관 대상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
- (4) 원본 개인정보 전체를 공개 게시판에 올려 달라고 요구한다.

43. 교재가 설명하는 동일조건 재입찰에서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가 이번에는 참가하려 한다. 그 업체는 적용되는 참가요건을 갖추었다. 최초 미참가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 (1) 미참가 업체는 가격을 두 배로 제출해야 참가할 수 있다.
- (2)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입찰 참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 (3) 재입찰에서는 자격요건 자체가 없어져 누구나 참가한다.
- (4) 최초 참가자만 입찰권을 독점하므로 배제한다.

44. 수의계약 파일에 최종 계약서만 있고 적용사유 검토·상대자 선정·가격협의를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 감사추적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은?

- (1) 사후에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허위 개찰표를 만든다.
- (2)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도 폐기한다.
- (3) 해당 사유의 검토자료, 대상자 적합성, 가격·조건 협의와 승인기록을 연결한다.
- (4) 공급업체 광고를 붙이면 선정·가격검토 기록이 대체된다.

45. 기술 담당자는 연동방식을, 사업 담당자는 납기를, 계약 담당자는 조건을 각각 협의했는데 서로 다른 버전으로 합의 내용을 기억한다. 교재의 협상관리 관점에서 보완할 것은?

- (1) 누가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제안서 원본을 삭제한다.
- (2) 분야별 담당자의 구두 기억을 각각 최종 계약조건으로 인정한다.
- (3) 권한·역할을 정하고 합의사항과 미합의사항을 하나의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관리한다.
- (4) 미합의사항은 기록하지 않아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6. 허용된 협상범위 안에서 업체가 장비가격을 200만 원 낮추는 대신 기존 포함 유지관리비를 연 80만 원씩 3년간 별도로 받겠다고 제안했다. 할인율·세금·다른 차이가 없을 때 총비용 효과는?

해당 조건 교환이 허용된 가상 협상이며 할인현재가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기관 부담은 오히려 40만 원 증가한다.
- (2) 240만 원 감소한다.
- (3) 200만 원 감소한다.
- (4) 440만 원 감소한다.

47. 가상 심사기준은 이행능력점수와 가격점수의 합계가 95점 이상이면 통과한다고 정했다. A의 이행능력은 38점, 가격은 56.5점이고 다른 가감점은 없다. 판정은?

학습용 점수입니다. 별도 가감점과 반올림·올림 규칙,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 (1) 가격점수가 이행능력점수보다 높으므로 통과한다.
- (2) 총점 94.5점으로 기준 미달이다.
- (3) 총점 94.5점이지만 기준에 근접하므로 자동 통과한다.
- (4) 총점 95점으로 임의 올림하여 통과한다.

48. 동일 규격·인도조건의 희망수량 입찰에서 A는 100개·총액90만 원, B는 80개·총액72만 원을 제시했다. 두 총액은 각 희망수량에 단가를 곱한 값이며 다른 비용은 없다. “B의 총액이 낮으므로 B의 단가도 낮다”는 분석의 검토는?

금액·수량·동일 조건은 학습용 사례이다. 동가처리 기준을 추가로 가정하지 않는다.

- (1) A의 공급수량이 많으므로 개당 가격을 계산하지 않아도 A가 더 비싸다.
- (2) 각 총액을 희망수량으로 나누면 단가는 모두9천 원이므로, 총액 차이만으로 B의 단가가 더 낮다고 볼 수 없다.
- (3) 희망수량경쟁에서는 수량을 제시하므로 단가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 (4) B의 총액이18만 원 낮으므로 단가도 개당18만 원 낮다.

49. 가상 종합심사는 수행능력 40점, 가격 60점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을 한 번만 더한다. A의 수행능력 35점, 가격 55점이며 그 가점 대상이다. 담당자가 수행능력에도 1점, 최종합계에도 1점을 더했다. 올바른 총점은?

구성·점수·가점 방식은 학습용 산식입니다.

- (1) 91점이다.
- (2) 90점이다.
- (3) 92점이다.
- (4) 96점이다.

50. 탈락 업체가 결과 설명을 요청한 상태에서 정식 이의 제기 기한도 확인하려 한다. 절차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행동은?

구체적 법정 기한이나 해당 사업의 이의 제기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문항이 아니라,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는 관리 원칙을 묻습니다.

- (1) 설명 요청을 했으므로 모든 이의 제기 기한이 자동 정지된다고 본다.
- (2) 설명 요청과 정식 이의 제기를 구분하고, 적용되는 기한·대상·제출처를 별도로 확인한다.
- (3) 내부에서 불만을 메모하면 권한 있는 기관에 접수한 것과 같다.
- (4) 담당자와 통화하면 서면 제출요건도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공공계약관리

51. 당초 계획은 6월 납품이고 변경계약으로 7월 납품이 승인되었다. 관리자가 기존 계획 파일을 덮어서 7월 계획만 남겼다. 이후 일정 변경의 원인과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보완할 기록은?

- (1) 담당자의 최종 구두 설명만 녹음한 파일
- (2) 현재 납품월만 기록한 달력 이미지
- (3) 당초 기준선, 승인된 변경내용·사유·시점, 현재 적용 계획의 연결 기록
- (4) 변경 전 파일을 복원한 뒤 승인된 변경계약은 삭제한 자료

52. 용역 계약 체결 후 착수회의를 연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초기에 확인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법정 착수일 수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서와 다른 구두 요구가 생기면 확인 없이 우선 적용한다.
- (2) 낙찰이 끝났으므로 실제 수행인력과 일정은 협의하지 않는다.
- (3) 과업이 끝난 뒤에야 양측의 보고 담당자를 지정한다.
- (4) 계약상 과업범위, 산출물, 협의·보고 경로와 주요 일정에 대한 공통 이해

53. 계약변경 검토서를 원인별로 분류한다. ㉠ 같은 품목의 시장가격 변동, ㉡ 설계도서상 시공물량 변경, ㉢ 발주기관 요청으로 운반거리만 변경된 사안이다. 교재의 분류에 맞는 연결은?

- (1) 운반거리 변경은 물품 종류를 바꾸지 않으므로 계약변경 검토에서 제외한다.
- (2) 세 사안 모두 업체 원가가 변하므로 물가변동으로만 처리한다.
- (3)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기타 계약내용 변경이다.
- (4) ㉠ 물가변동, ㉡ 설계변경, ㉢ 기타 계약내용 변경이다.

54. 교재의 합의해지 설명을 적용한다. 당사자들은 별도 손해배상 약정이나 청구 유보 없이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한쪽이 종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합의해지 자체에서 자동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교재의 설명에 맞는 것은?

교재의 일반적 합의해지 설명을 적용하는 사례이며 개별 사건의 묵시적 유보 등 추가 사정은 없습니다.

- (1) 합의해지이면 손해배상 약정 없이도 위약벌이 자동 확정된다.
- (2) 합의해지의 내용과 특별한 약정 유무를 보며, 제시된 조건만으로 그 손해배상청구가 자동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 (3) 합의해지 서명은 당사자 전원의 불법행위 자백이다.
- (4) 배상 약정이 없으면 이미 완성한 기성부분의 대가도 언제나 사라진다.

55. 기관이 다음 달 개관에 사용할 장비의 생산계획을 점검한다. 부품 지연이 확인되었지만 업체의 주간보고에는 당초 납품일만 반복되어 있다. 일정관리 자료의 가장 직접적인 보완은?

- (1) 개관일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생산 상황과 관계없이 완료로 기록한다.
- (2) 당초 납품일을 보고서에서 지워 지연 여부를 비교하지 못하게 한다.
- (3) 실제 공정 진척, 예상 납품일 변동, 대체 조달·운송 등 대응안과 그 영향을 함께 보고하게 한다.
- (4) 장비의 판매가격만 매주 보고하면 납품일 예측을 대신할 수 있다.

56. 검사에서 통신 오류가 발견되어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수정 파일은 제출했지만 문제 기능과 영향받는 연계 기능은 다시 시험하지 않았다. 오류관리의 남은 단계는?

- (1) 시정 조치가 효과적인지 재시험하고 연계 영향까지 확인한 뒤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 (2) 처음 불합격했으므로 수정 결과와 관계없이 영구히 종결할 수 없다.
- (3) 수정한 업체의 작업시간을 성능시험 결과로 갈음한다.
- (4) 수정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류가 해결되었다고 종결한다.

57. 계약 시작 시 “핵심 자재의 재고가 5일분 이하가 되면 대체 발주를 검토한다”는 대응 기준을 정했다. 월간보고서에 재고 3일분이 기록되었으나 아무 조치 없이 보관했다. 부족한 것은?

5일·3일은 가상 내부 위험관리 기준과 관측치입니다.

- (1) 5일 기준을 결과를 본 뒤 2일로 바꾸면 조치 누락이 사라진다.
- (2) 관측된 경보가 정한 발동 기준을 넘었는지 평가하고 담당자의 대응으로 연결하는 절차
- (3) 재고 수치를 기록했으므로 위험 대응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 (4) 계약 초기에 위험목록을 작성했으므로 이행 중 변화는 다시 보지 않는다.

58. 구매규격은 실내 25°C 환경에서 정해진 출력을 충족하도록 정했다. 시험자는 계약에 없는 60°C 환경에서 측정한 출력만으로 납품 불합격을 결정하려 한다. 이 문제에는 별도의 법정 고온시험 의무가 없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별도의 안전법령·합의된 특수조건이 고온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가장 가혹한 환경일수록 계약과 무관하게 불합격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2) 기관이 선택한 환경이면 구매규격을 사후에 변경한 것으로 본다.
- (3) 시험환경과 판정기준을 계약상 요구조건에 맞춰 적합 여부를 평가했는지 확인한다.
- (4) 조건이 달라도 측정 장비가 정밀하면 동일한 판정이 된다.

59. 물품 인수와 최종 대금 지급이 끝났지만 하자보수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는 약정기간 동안 남아 있다. 계약종결 보고의 적절한 표현은?

- (1) 주된 공급·정산은 완료하되 존속 의무와 담당자·기간을 별도 이관한다.
- (2) 잔여 의무가 하나라도 있으면 인수와 정산 완료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 (3) 하자보수 의무는 물품 사용자에게 자동 이전된 것으로 적는다.
- (4) 최종 지급일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의무가 소멸했다고 적는다.

60. 가상 계약은 지체상금을 “(계약금액-검사·인수한 가분 부분의 금액)×부과일수×일률”로 정한다. 계약금액 1억 원, 공제할 인수 부분 2천만 원, 총 지연 7일 중 약정상 제외 2일, 일률 0.001이다. 지체상금은?

산식과 일률은 학습용 가상 조건입니다. 현행 법정 요율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공제·제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정합니다.

- (1) 50만 원
- (2) 40만 원
- (3) 70만 원
- (4) 56만 원

61. 교재는 등록의 효과를 권리 발생, 제3자 대항요건, 면허 부여,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가까운 기능은?

- (1) 입찰 참여라는 일정 행위를 위한 사전 요건을 갖추는 기능
- (2) 입찰 대상 제품의 특허권을 새로 발생시키는 기능
- (3) 입찰금액만큼의 확정 납품대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능
- (4) 업체 제품을 기관의 소유로 이전하는 기능

62. 가상 희망수량 구매입찰은 동일 단가에서는 공급 희망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했다. 남은 수요는 80대이며 A와 B의 단가는 같고 A는 50대, B는 70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동가 기준에 따른 우선 검토자는?

동가 기준은 지문에 제시한 가상 공고조건이며 다른 자격·가격 요건은 충족합니다.

- (1) 두 업체의 단가가 같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 (2) B
- (3) A
- (4) A와 B가 반드시 각 40대씩 배정받는다.

63. 기존 소액수의계약이 이행 도중 해지되었다. 이 사례에 적용되는 절차는 차순위자 중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이행분 계약에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해 계약할 수 있도록 정한다. 차순위 업체 검토로 적절한 것은?

해당 잔여계약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합니다. 모든 계약 해지에 이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1) 처음 제출한 순위만으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잔여 이행을 강제한다.
- (2) 이미 완성·인수된 부분도 새 계약에 다시 전부 포함한다.
- (3) 최초 계약의 견적률은 폐기하고 차순위자의 희망가격을 검토 없이 적용한다.
- (4) 잔여 범위의 이행 동의와 배제사유를 확인하고 최초 계약의 견적률 적용 여부를 대조한다.

64. 학습용 공정 비교에서 개선 전 전수검사 500개 중 불량 25개, 개선 후 전수검사 800개 중 불량 24개가 나왔다. 같은 불량 정의를 사용했다. 관측 불량률의 변화는?

가상 전수관측 자료이며 불량 기준이 동일합니다.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은 묻지 않습니다.

- (1) 5%에서 4.8%로, 0.2%포인트 낮아졌다.
- (2) 개선 후 생산량이 늘었으므로 불량률도 증가했다.
- (3) 5%에서 3%로, 2%포인트 낮아졌다.
- (4) 불량 개수가 1개만 줄었으므로 불량률도 1%포인트만 낮아졌다.

65. 가상 변경정산은 실제 추가비용만 인정한다. 추가 운송 견적 180만 원 중 기존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지금 대상인 60만 원은 별도 가산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변화가 없다면 새로 가산할 금액은?

비용 인정범위와 중복액은 유효하게 확정된 가상 조건이며 법정 정률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 (1) 120만 원
- (2) 60만 원
- (3) 180만 원
- (4) 240만 원

66. 적법한 지역제한 용역 공고가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A사의 본점은 다른 지역에 있고 대상 지역에는 현장사무소만 있다. 참가자격을 검토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지역제한의 적용이 적법하고,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공고라는 조건이다. 적용금액 및 기준일은 묻지 않는다.

- (1) 계약을 수행할 직원이 해당 지역에 머물면 등기부상 본점도 그 지역으로 본다.
- (2) 용역 공고의 지역제한은 모든 경우 작업장 소재지만으로 판단한다.
- (3) 현장사무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 (4) 현장사무소 주소를 견적서에 쓰면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된다.

67. 용역 제안요청서는 보안점검 수행방법, 투입인력, 결과보고서 구성을 요구한다. 제안서의 설명력을 높이는 작성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용역 제안서의 구성 원리를 묻으며 보안점검 기술의 구체적 방법이나 입찰 점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 (1) 실제 투입할 수 없는 인력을 기재하고 낙찰 후 조정하기로 한다.
- (2) 회사 연혁을 길게 작성하고 요구사항별 수행 설명은 생략한다.
- (3) 각 요구사항에 수행방법·담당인력·산출물·증빙자료를 대응시켜 작성한다.
- (4) 자료의 모델·사업·기간이 달라도 인증서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

68. 경쟁적 대화의 기본 제안서로 참가자가 선정되었다. 기본 제안서와 최종 제안서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1) 최종 제안은 기본 제안서의 표지만 바꾸는 문서이므로 대화 결과를 반영할 수 없다.
- (2) 기본 제안은 대화 참가자 선정에 쓰이고, 대화로 구체화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제안은 이후 평가의 대상이 된다.
- (3) 기본 제안이 제출되면 대화 없이 그 업체의 최종 낙찰이 확정된다.
- (4) 기본 제안서가 있으므로 가격 관련 자료는 어떤 단계에서도 필요 없다.

69. 가상 적격심사는 “동종 유지관리 완료실적만 인정”한다. 한 완료계약 5천만 원 중 유지관리 3천2백만 원, 장비 구매 1천8백만 원이 증빙으로 구분된다. 주어진 기준상 인정액은?

실적 인정 범위와 금액은 가상이며 실제 공고의 실적 환산기준은 별도로 확인한다.

- (1) 0원
- (2) 1천8백만 원
- (3) 3천2백만 원
- (4) 5천만 원

70. MAS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거래조건 일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교재의 가격자료 제출 설명에 맞는 보완은?

- (1)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품목과 거래조건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2) 해당 관리기준에 맞춰 계약·거래조건 등 추가 증거자료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 (3) 확인되지 않는 조건은 업체가 유리한 값으로 임의 입력한다.
- (4)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과거 거래기록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 만든다.

71. MAS 협상품목으로 승인된 것은 표준형 X인데 업체가 고급형 Y의 거래명세만으로 X의 가격협상을 요청했다. 규격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검토는?

- (1) 승인된 X의 규격과 거래조건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다른 규격 자료의 적용 근거를 검토한다.
- (2) 제조사가 같으면 규격이 달라도 가격자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본다.
- (3) 비싼 모델의 가격자료일수록 X의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므로 그대로 채택한다.
- (4) 협상품목 승인 후에는 가격자료의 품목 확인이 필요 없다.

72. 교재의 MAS 2단계경쟁 평가유형에서 A형과 B형의 활용 취지를 구별한 것은?

- (1) B형은 제품의 차이가 없을 때 가격만 비교하기 위한 유형으로 한정된다.
- (2) A형은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예산 절감에, B형은 규격·성능 등의 차이가 클 때 예산 범위에서 양질의 제품 구매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연결된다.
- (3) A형은 제품 간 성능 차이가 클수록 품질만 평가하고 가격은 보지 않는 유형이다.
- (4) A형과 B형은 구매 목적이 아니라 업체 상호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73. 업체가 자사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교재의 절차에서 확인할 핵심은?

- (1) 해당 제도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 여부와 제출 카탈로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 (2)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모든 디지털서비스 계약요건이 자동 충족된다.
- (3) 서버 수가 많을수록 카탈로그 등록 절차가 면제된다.
- (4) 상품명에 클라우드라는 말이 있으면 심사·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74. 설계 검토자가 보와 기동의 하중·응력 등에 관한 계산 근거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교재가 나열한 설계도서 중 이러한 계산 근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문서는?

- (1) 시설 외관의 색채를 보여주는 투시도
- (2) 납품업체 연락처 목록
- (3) 구조계산서
- (4) 공사비의 총액만 적힌 집계표

75. 학습용 공고 설명에서 공사 전체 산정액을 “시공사 도급분 90억 원 + 기관이 별도로 지급하는 자재 15억 원”으로 정의했다. 부가세 등 다른 차이는 없고 시공자는 도급분만 가격 제안한다. 두 금액의 적절한 구별은?

금액 구조를 학습하기 위한 가상 정의이며 법정 금액 산정식이나 세금 규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1) 시공자는 전체 105억 원을 모두 자기 구입비로 전액해야 한다.
- (2) 전체 산정액은 관급자재를 빼므로 75억 원이다.
- (3) 도급분과 관급자재가 나뉘면 전체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 (4) 전체 산정액은 105억 원이고, 시공사 도급분의 범위는 90억 원이다.

76. 가상 PQ 기준은 교량공사 실적만 인정한다. 제출된 복합사업 준공실적 120억 원 중 교량공사는 72억 원이고 나머지는 도로 부대공사이다. 이 기준에서 인정할 금액은?

대상 공종·인정 범위는 가상 기준이고 실적 분리 증빙이 충분하며 중복 인정은 없습니다.

- (1) 0억 원
- (2) 120억 원
- (3) 48억 원
- (4) 72억 원

77. 굴착 중 설계도서가 전제한 지반과 다른 지층·지하수가 발견되었다. 그대로 진행하면 상황이 가려져 원래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우선적인 계약·기술 관리 조치는?

- (1) 상이한 현장조건의 위치·상태·영향을 기록하여 정해진 통지·확인 및 변경 검토 절차로 연결한다.
- (2) 현장 차이가 있으면 모든 공사비를 업체 요구대로 즉시 증액한다.
- (3) 설계도서가 있으므로 실제 지반이 달라도 일체 기록하지 않는다.
- (4) 먼저 가린 뒤 최종 정산 때 구두로만 현장 차이를 주장한다.

78. 입찰 평가에서 특정 책임기술자의 경력을 제시하여 평가받았다. 낙찰 후 그 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보내고, 변경 승인이나 대체자 요건 확인 없이 경력이 크게 다른 인력을 투입하려 한다. 적절한 관리는?

- (1) 평가 때 약속한 배치조건과 실제 투입을 연결하고 정해진 변경·대체 요건을 확인한다.
- (2) 배치기술자 자료는 점수용이므로 낙찰 후에는 실제 투입과 무관하다.
- (3) 새 기술자의 급여가 낮으면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 대표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면 어떤 인력 교체도 자동 허용된다.

79. 설계용역 계약의 보수는 1억 원이고, 설계자가 산출한 시설 시공비는 30억 원이다. 담당자가 두 수치를 같은 계약의 지급대가로 보고 31억 원을 설계용역 지급 대상에 넣으려 한다. 적절한 구별은?

설계 보수와 공사비의 계약·업무 범위가 명확히 분리된 가상 사례입니다.

- (1) 두 금액은 명칭만 다르므로 작은 금액을 삭제하면 정산이 끝난다.
- (2) 설계 보수 1억 원이 있으면 실제 시공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 (3) 설계자가 공사비를 계산했으므로 그 공사비 전액도 설계 보수에 더한다.
- (4) 설계 업무의 용역대가와 설계도서가 산정한 향후 공사의 비용은 서로 다른 금액이다.

80. 발주기관 감독자가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품질을 확인했다. 업체는 이 확인만으로 기관과 자신 사이에 별도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한다. 별도 직불합의·법정 직접지급 요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판단은?

- (1) 현장 감독·품질 확인과 직접 계약관계·직접지급청구의 성립 요건을 구분한다.
- (2)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이 있으므로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 (3) 감독자의 확인이 있으면 원도급계약의 이행 책임은 모두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
- (4) 감독자가 현장을 방문하면 기관이 모든 하도급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답안 기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